

'NO 킬러 수능' 2년 차, '대입 혼란' 랜덤 출제진... 변별력 시험대

'사교육 유착' 감사 반영한 '공정성 강화 방안' 적용 고3 상위권도 늘고 N수생도 증가, 의대 증원 변수도 출제위원 무작위 추첨... '체감 난이도 널뛰기' 우려돼 사교육 연관성 이의심사... 잡아내면 그 문제 어찌하나

'킬러문항 배제' 2년차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입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해 변수가 많은 환경에 공정성 문제로 출제진까지 무작위 선정하게 되면서 난이도 조절 실패의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사교육 판박이' 문제를 잡으려다 수능 공정성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 이의심사 과정에서 사교육과 연관된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가법게 넘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 '모두 정답' 처리할 지도 미지수다.

3월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앞서 3월 28일 올해 수능 시행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지난해 일부 과

목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해 수능 출제 기조, 특히 난이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매년 이맘때 평가원장의 말은 매우 원론적 수준에 머문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쉽게 내겠다'는 의도를 이례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 당국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 변별력을 갖췄다고 자평했던 지난해 수능은 '불수능'을 넘어 '용암수능'이란 평가까지 받았을 정도였다. 만점자는 단 1명이었고, 이 1명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수능을 내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사교육 카르텔' 세무조사를 받았던 유명학원 출신 재수

생이었다.

문제는 수능 난이도는 평소에도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다. 객관적으로 쉽게 냈더라도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면 만점자 표준점수는 치솟고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의 여파 속 수험생의 특성도 예년과 무척 다르다. 의대 증원이 예고되면서 N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나왔지만, 올해는 고3마저 상위권 규모가 늘어날 분위기다.

올해 고3은 41만5183명으로 학생 수 감소 흐름 속에서 이례적으로 지난해보다 5.1% 증가했다. 내신과 수능은 모두 1등급이 수험생 전체 4%로 고정돼 있어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 상위권 수는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처럼 출제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평가원은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의 '사교육 판박이' 의혹이 지적되면서 나온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이다.

이 대책에 따라 평가원은 사전에 국제청 자료까지 받아서 검증을 거친 뒤 사교육 업

체와 연관성 없는 인사들을 모아 후보 명단(풀)을 구성한다. 그 안에서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출제위원 후보를 정한다. 추천을 몇 배수로 할 지 그 규모까지도 전산 추첨으로 정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출제가 잘 될까"라며 "출제진의 팀워크도 문제고, 무작위로 선정했을 때 만약 출제 경력이 짧은 위원들이 투입되면 수능 난이도가 널뛰듯 할 수 있어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어느 영역에서 난이도 조정을 할 지가 문제"라며 "상황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불수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수능이 끝나고 이뤄지는 이의신청을 통해 출제됐던 문제가 사교육 업체 문제지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하면 현직 교사들이 검토를 거치기로 한 점도 우려를 산다.

물론 출제위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수능 출제에 관여한다면 중대한 범죄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그 신고를 수험생들에게 떠맡긴 풀이라 자칫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설령 이의심사 결

과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해도 대처가 불분명하다. 교육부는 '모두 정답' 처리 여부에 즉답을 피하고 있다.

임 대표는 "현재 수능 출제오류는 문항에 대한 '모두 정답' 처리 등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지만 공정성 문제가 비화될 경우 해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문제 처리 방식을 두고)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소장도 "문제가 사교육과 유사하다고 해서 어떤 수험생 집단에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은 쉬운데 과연 (대처가) 쉬울까"라고 했다.

결국 첫 시험대인 6월 모의평가부터 난이도 널뛰기가 발생할 경우 올해 수험생들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임 대표는 "이미 무전공 선발로 인한 학과별 모집정원 변화,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변동 정도, 반수생 유입정도 등 대입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그 어느 해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선욱기자



'에어쇼 펼치는 공군 블랙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근에서 여의도 봄꽃축제 축하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사전투표, 본 투표와 차이나 의심"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투표소와 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셨나요. 현재 확인된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다. 불법 카메라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저는 좀 의심하고 있었다. 사전투표가 본 투표와 좀 많이 차이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의 영상실질심사는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그는 최근 다음달 5일과 6일에 열리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경상남도 양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점

검을 했다.

이후 15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천에서는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서창 2동, 계양구 계산 1·2·4동, 부평구 부개1동, 연수구 송도1·2·3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을 비롯한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 사전투표 및 개표장으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있는 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설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증거없음' 흥기 위협 40대 풀려나

고흥터미널에서 흥기를 휘두른 40대가 조사 중 풀려나 경찰 초동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경찰서는 불특정 시민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50분께 고흥군 노동터미널에서 시민에게 닳을 휘두르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은 주변 시민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타고 달아난 택시를 특정해 쫓아갔다.

경찰은 택시 조수석에 탄 A씨가 닳을 들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그러나 체포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A씨를 귀가 조치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체포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해명했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농사지을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주변에 A씨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신고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약국 57개 적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구매하고도 사용량은 저조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콧물약, 해열시럽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사재기를 현장 조사한 결과, 57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가 조사한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도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펴 현탁액 500ml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곳에 대해 현장 고발과 사용량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골목길 지나가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집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울산 중구의 한 골목

길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을 향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판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수권기자